신속 · 안전 · 체계적 복구활동 지원

전북도 재난봉사단 출범… 재난재해 발생시 정보교류 · 협력 강화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기원)는 재난재해 발생 시 현장상황에 맞는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연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 재난봉사단' 출범식을 가졌다.

전북도 재난봉사단은 도내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되어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를 비롯한 7개의 협력기관과 15개의 재난안전 네트워크 회원단체 봉사자 총 43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재난봉사활동 영상상영, '사회재난 행동요령 및 재난관리 이해'를 주제로 변효석 안전모니터봉사단 전북연합회장의 특강, 전북도민의 안전을 기원하고 안전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은 재난봉사단 뱃지 달아주기와 재난봉사단을 대표하여 강성만, 김옥녀 봉사자께서 재난재해 예방과 긴급구호 및 복구지원활동에 책임감을 갖고 전문 재능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 한해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한 전라북도 구현'에 힘쓰고자 '안전한 전라북도, 행복한 전라북도, 재난ZERO 전라북도'라는 슬로건 아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고자 이색적인 캘리그라피 카드섹션을 펼쳤다.

송하진 도지사는 "사회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해 중요한 시점인 만큼 각 기관과 봉사단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전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8일 군산에 위치한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홍영표 특위위원장, 안호영 의원, 김윤덕 전북도당위원장, 최정호 정무부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GM 노조와 협력업체 등을 만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현장간담회를 갖고 있다.

민주당 한국GM 특위 "본사만 이익보는 경영구조가 문제"

군산서 현장간담회

홍영표 특위위장 "정부, 1단계 조치 이어 2단계 준비 중"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 "군산공장 재가동 통한 정상화 우선"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GM) 대책특별위원회가 8일 군산시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특위 위원, 한국지엠 노조, 전북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등에서 참석했다.

"지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홍영표 지엠 특위 위원장은 "인천에서 군산을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실직은 살인'이라는 현수막 글귀를 봤다. 실직의 충격과 고통을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 홍 의원은 "지엠 본사만 이익을 보는 경영구조가 부실을 부추겼다"면서 "정부는 1단계 조치에 이어 2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엠 특위 위원에 김윤덕 전북도당위원장과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 등을 추가로 영입해 군산공장에 대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불투명한 경영 등이 문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지엠에 대한 철저한 재무실사와 더불어 지역경제 및 노동자 지원 등을 꼼꼼하게 챙기겠다.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지엠 군산공장 재가동을 통한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군산공장 정상화가 빠진 정부 지원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노조 측은 군산공장의 폐쇄는 근로자들의 잘못이 아닌 무능한 경영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을 하고 싶다"는 이들은 "군산공장 폐쇄로 근로자 2000여명과 13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부품공장)가 줄도산돼 근로자 1만1000여명이 실직하게 된다"며 당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김지은 비하 글 올린 민주당 도당 간부 '탈당'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정무비서를 비하하는 듯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8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도당간부 A씨는 전날 당직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1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계 강압.. 술 마시니까 확 올라오네. XX 그X도 제 목적을 위해서일까, 알 듯 모를 듯 성 상납한 것 아냐. 지금 와서 뭘 까는데'라는 글을 올렸다. /뉴시스

부안 양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군, 농식품부로부터 지정서 받아

부안군 유유동 양잠 농업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지정서를 받았다.

8일 부안군은 "이날 김종규 부안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8호로 지정된 양잠 농업시스템 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양잠 농업시스템은 부안 변산면 마포리 유유동 일원 58.9㏊로 농업유산자문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양잠 농업은 뽕나무 재배에서 누에 사육까지의 일괄 시스템이 전승되고 있으며, 조선시대부터 부안현의 토산품은 뽕으로 기록돼 있을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양잠 농업이 유지 보존되는 역사적 기록과 누에 생육에 가장 중요한 온도, 통풍관리 등이 타 지역과 다른 유유동의 독특한 전통 잠실이 마을 자체적으로 보전되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 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양잠 농업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국가 예산 15억원을 지원받아 경관보전 및 다양한 관광상품·프로그램 등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뉴시스

탄소소재 적용분야 다양화 시도

도, 기존 자동차 등에서 항공 · 전기차 · 의료기기까지 확대

전북도는 탄소산업 육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기존의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분야는 물론 항공, 전기·자율주행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 등 탄소소재의 우선 적용이 가능한 분야로 탄소소재 적용분야를 다양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탄소산업은 대표적인 소재산업으로 소재부터 부품, 응용제품에 이르는 전후방 산업과 함께 기계, 화학수지 등 연관산업까지 아울러야만이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산업이다.

탄소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탄소소재를 적용하는 응용제품이 가격과 기술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탄소소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응용산업에서 적극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소재의 가격문제는 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다양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에서는 단기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탄소소재가 갖는 기능적 특성이 적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제품 시장 진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도 임노욱 탄소산업과장은"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정부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법개정과 진흥원 설립에 주력하겠지만 전북도 차원에서도 탄소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응용산업분야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검찰, '다스 비자금 300억' 잠정 결론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회사 경영진 등이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린 검찰은 오는 14일 예정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다스 횡령 등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전담팀은 애초 알려진 비자금 120억원을 직원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이와 별개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존재를 파악했다. 당시 검찰은 비자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추가로 발견된 비자금과 관련해 자금 조성 과정과 수법, 규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수사를 통해 다스 경영진들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300억원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스 임직원과 대주주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횡령 액수 등 범행 개요는 계속 수사 중인 상황이라 지금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